

벼락치기 심사... 쟁점예산 '깜깜이' 소소위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안상수 예산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소위 주말 풀가동... 7개 상임위 1차 감액 심사 대북협력기금·각 부처 특별비 보류...30일 처리 빠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사를 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모든 역량을 모아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꾸려져 '벼락치기 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2일 가동되기 시작한 예산소위는 휴일인 25일까지 나흘 연속 밤늦게까지 회의를 열어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 전날까지 사흘간 모두 16개의 국회 상임위 중 7개 상임위 소관 부처의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예산소위가 너무 늦게 구성된 데다, 일자리 예산·남북협력기금·공무원 증원 등 쟁점이 수두룩해 불과 한 주 남은 법정시한 준수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

오고 있다. 예산소위는 전날까지 사흘간의 심사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업들을 여야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끼리만 별도로 논의하는 '소(小)소위'로 대부분 넘겼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통일부의 대북협력기금 심사는 순도 못됐다. 한국당이 '비공개 사업 내역에 대한 통일부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깜깜이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고, 결국 통일부 예산안 심의가 뜰째로 보류됐다. 또,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심사도 일괄 논의를 위해 소소위로 넘겨지는 등 쟁점 예산은 모조리 소소위로 미뤄둔 모양새다. 과거에도 여야는 법정시한을 코앞에 두

고 심사 속도를 높이고자 관례로 소소위를 구성해 쟁점 예산을 논의해 왔다.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일요일이라 이달 30일에 본회의가 잡혀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빠듯하다. 이 때문에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기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말이 예결위 내부에서도 나온다. 예산소위가 예정대로 이번 주 초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다 해도, 정부 동의가 필요할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증액 심사가 남아 있는 데다, 올해는 유독 여야 대립이 극심한 쟁점 예산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 2014년부터 국회 예산심사는 예산안 자동부제에 적용을 받고 있다.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속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다. 예산안을 두고 법정시한까지 여야가 어

떤 항목을 쥐고 어떤 항목을 증액할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상정된다는 이야기다. 예결위는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휴일에도 심야까지 예산소위를 '풀가동'하며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소위 심사 일수가 워낙 짧아서 '줄속·날림 심사'가 이뤄질 거란 우려가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움직임까지 보여, 법정시한이 다가올수록 극심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는 자동부제의제 처음 도입된 2014년 외에는 모두 심사기한을 넘겼다.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새벽에 예산안이 통과됐고, 지난해에는 12월 6일 새벽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임종석 "남북 철도 연결, 2억명 내수 형성"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이 유엔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며 "남북의 합의·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임 실장은 이어 "평양 선전에 담긴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면서 영동해게 만주와 대륙을 떠올렸다"며 "저는 자주 지도를 펼쳐 동북아 지역을 들여다 보면 한다. 요녕·길림·흑룡강의 동북 3성은 지금 중국 땅이지만 장차 한반도와 바다로, 하늘로, 그리고 마침내 육지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언



급했다. 이어 "2억(명)이 훌쩍 넘는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사람이 나가고 대륙의 에너지망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동에서 같이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상력을 활짝 열어야 하며, 과거의 틀에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않아야 한다"며 "떨린 도모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국 "민노총·참여연대, 함께 나아가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지난 22일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상황의 기시감이 든다"면서 "현재의 의회구조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라며 "그리고 현실에서 가능한 '반보'(半歩)를 확실히 내디디며, 다음 '반보'를 준비하려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러분의 비판은 좋다"며 "그렇지만 현, 현실에서 '반보' 내딛는 일은 같이합시다"라고 요청했다. /임동욱 기자 tuim@

한국당 '불의 전쟁' 개막

내주 당헌·당규개정위 가동...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초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위한 '불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5일 "12월초에 곧바로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당헌·당규개정위는 한 달 동안 활동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김용태 사무총장이 맡고, 김성원 조직부총장, 김석기 사무부총장,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추천한 인사들과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가 만든 당헌·당규 개정안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할 당헌·당규의 핵심 쟁점은 새 지도부 체제 및 선출방식, 이른바 '전대룰'이다. 이 가운데 당이 어떤 지도체제를

선택할 것인지가 핵심 중 핵심이다. 현재 한국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고 당대표가 의사결정과 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일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흥준표 대표 체제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원권 정치'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정비할지도 관심이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성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검찰이 표적 수사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규정은 과도하다'는 당내 시각이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당, 정부 노동정책에 견제구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재계 요구 쉽게 빗장 열어" 비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과 비슷한 정책 기조를 보여준 정의당이 노동정책과 관련, 여권의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정의당은 그동안 대북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호응해왔다. 하지만,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와 달리 독

자노선을 걸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탄력근로제 확대 정책이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가 이뤄진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5당 중 정의당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장시간 노동 합법화와 임금삭감을 부른다면, 노동존중 사회

를 만들겠다는 당초 정부의 국정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 등 강력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우려를 거듭 표하자, 정의당은 "민주노총 혼내기에만 열을 올린다"며 의견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정의당은 최근 최저임금 산업별위원회 확대 본격 추진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한 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재계 요구에 쉽게 타협하고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시각으로, 당분간 정부의 노동·경제정책 비판 기조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국회가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지만, 노동권을 축소하는 반노동 정책을 정부가 펴고 있어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집권 2년 차 들어 재계의 요구에 너무나 쉽게 빗장을 열어주고 있다"면서 "정부가 노동권 확대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정목표를 독심 있게 추진하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